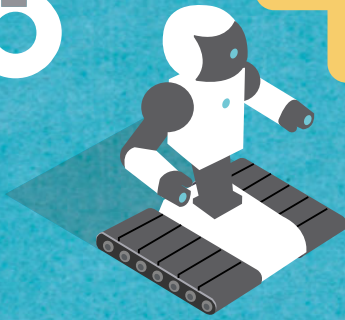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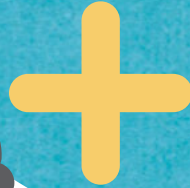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18 / June 2018

06



재정 인사이트

기획특집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와 방향

재정칼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포용성장과 재정개혁 과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자연순환정책 방향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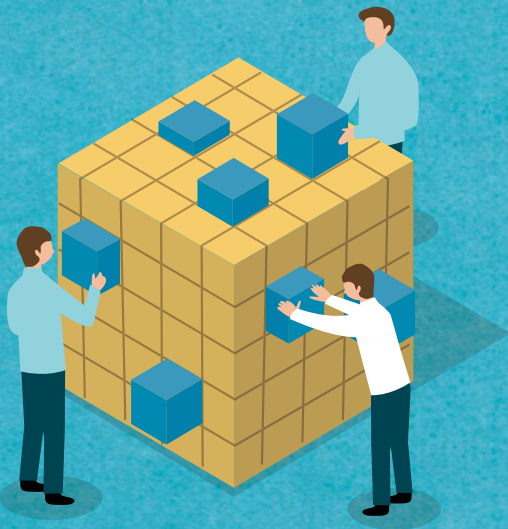
재정투명성과 정보공개
e나라도움 포털 개편의 배경 및 특징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혁신 발전

Photo Essay
포토에세이



발전의 동력이 되는 혁신의 가치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혁신하려면 폐기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생각과 관행에 머무는 순간
더 나은, 더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꿈꾸고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JUNE
2018 Vol. 18

재정 인사이트

06 기획특집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와 방향
최병진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12 재정칼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조석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포용성장과 재정개혁 과제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자연순환정책 방향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재정과 정보

24 이슈포커스

재정투명성과 정보공개
e나라도움 포털 개편의 배경 및 특징

36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48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남북정상회담

52 해외재정동향

주요국의 국가채무 관리조직 현황

59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⑥

젊은 독립국가 초기 미국의 국토 확장

61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6



15



48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획특집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와 방향

최병진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재정칼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조석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포용성장과 재정개혁 과제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자연순환정책 방향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와 방향

최병진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bjchoi66@korea.kr



하천은 문명의 발상지이자 인류가 탄생한 이후 생활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천은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짐에 따라 과거의 치수, 이수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친수, 자연환경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하천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소하천 관리의 필요성

하천은 규모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小河川)으로 나뉜다. 이중 소하천은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하며 산간계곡과 농경지 등에서 모인 물을 하류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상당 기간 동안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하천의 평균 폭이 2m 이상이고 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한다.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계법률	하천법('61.12월 제정)		소하천정비법('95.1월 제정)
규모	62개소, 2,995km (48.3km/개소)	3,773개소, 26,789km (7.1km/개소)	22,823개소, 35,324km (1.5km/개소)
관리청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위치	하류	중류	상류
피해 형태	홍수로 인한 제방 붕괴 및 범람		상류 지역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유출 및 유송잡목 등으로 인한 소하천 형상 변경 등 복합 피해
주요 차이	국가·지방하천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과 원활한 용수공급 등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관리가 목적		- 소하천의 대부분은 폭이 좁은 실개천으로서 마을·주택·농경지 등을 관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임 - 대부분 건천으로 용수 이용·관리 측면보다는 재해예방 차원임

소하천은 전국 17개 시·도의 193개 시·군·구에서 총 22,82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연장은 서울-부산 거리의 90배 정도인 35,324km에 달한다. 우리나라 지형은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이고 동고서저형으로서 중·대규모 하천은 넓은 유역과 동서로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와 연결되는 소하천은 하천 길이가 짧고 유역 면적이 작으며 경사가 급하여 우기를 제외하면 물이 매우 적게 흐른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시작한 소하천은 마을을 관통하는 개울 등으로 이루어져,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생활오수 등을 버리는 하수구 역할을 해왔었다. 그리고 홍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하천 제방의 내구성이 약하고 물이 흐르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제방 유실, 가옥 침수 및 파손 등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오·폐수 배출 및 쓰레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등 특정한 시기에 태풍과 호우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연재해는 대부분 풍수해로 나타나며, 하천 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하천 피해액 7,726억 원 중 소하천 피해액은 3,116억 원(40.3%)이며, 복구액 2조 4,006억 원 중 소하천 피해 복구액이 7,865억 원(32.8%)을 차지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전국하천 피해액 대비 소하천 피해액

(단위: 억 원)

연도별		연평균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내용													
전국 하천	계	773	7,726 (100%)	512	134	938	596	2,266	1,458	413	750	3	656
	국가 및 지방하천	461	4,610 (59.7%)	264	53	507	323	1,388	797	176	629	1	472
	소하천	312	3,116 (40.3%)	248	81	431	273	878	661	237	121	2	184
총 피해액		3,104	31,037	2,518	637	2,988	4,268	7,942	6,393	1,476	1,800	131	2,884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이에 따라 1995년 1월 당시 내무부는 소하천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정비사업, 점용 허가,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양여금 5,427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고 양여금이 폐지된 2005년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 2조 2,117억 원을 현재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이로써 법·제도적 기반과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연간 4,225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주된 내용은 좁은 하천폭의 확장, 교량과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 설치, 퇴적물 준설 등을 통한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소하천에서는 더 이상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국민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 전에는 쓰레기로 뒤덮였던 하천이 깨끗하게 달라져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쉼터로 변모하였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과정은 행정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통하여 진행된다. 먼저 시·군·구에서는 10년마다 관할하는 소하천의 정비기 본방침을 수립하는 위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5년마다 세운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목적과 개요, 설계도서, 사업비 조달계획서 등이 포함된 ‘소하천정비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측량 등 소하천의 기초 조사를 하고, 실시 설계와 사업자 선정 및 토지 보상, 지장물 철거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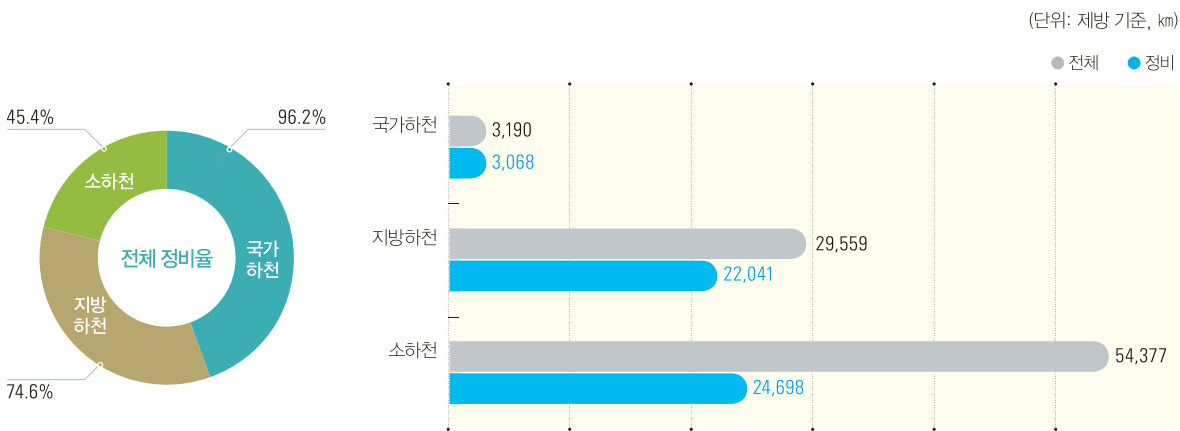


다양한 검토 과정 거쳐 사업 대상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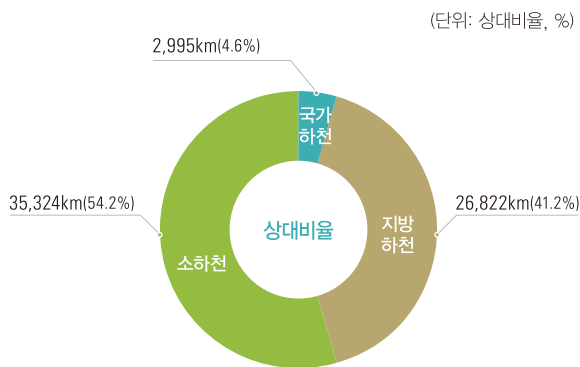
여기에서,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우선, 피해가 가정 우려되는 지역, 최근 5년간 재해이력 등 재해예방 기여도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토지이용현황 등 생활환경 개선 기여도가 30%, 주민 수혜면적 등 주민소득 증대 기여도가 20% 등의 비율로 검토된다.

소하천 정비대상 제방 연장은 전국 54,377km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정비를 마친 곳은 24,698km(45.4%)이다. 2017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6조 1,286억 원이며 향후 모든 구간을 정비하려면 28조 8,367억 원이 더 소요된다. 특히, 현재 45.4%인 소하천 정비율을 지방하천 수준인 74.6% 정도로 높이려면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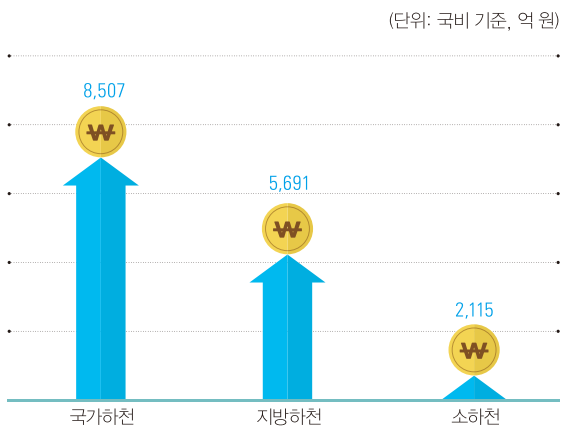
하천별 정비현황



하천별 중심연장 비교



하천별 2018년도 예산현황



개정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소하천 설계기준

한편, 소하천은 지역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그 기능 및 기후적인 여건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 축적된 자료를 소하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 규모가 소하천보다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획일화된 정비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소하천 정비는 입지 및 수문지형학적 특성이 다양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려사항과 함께 폭넓은 정비기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1999년에 ‘소하천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하천설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됨으로써 소하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2년 제정된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을 산지, 농경지, 도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입지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비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다양성에 기초한 적용기술의 표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소하천 설계기준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해외 경험식이나 하천설계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소하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17년 12월에 국회로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소하천 설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고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해설서를 발간하여 실무 관계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증가로 물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친수활동 욕구를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의 방향이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소하천으로 개선되고 있다.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동·식물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자연형 하천정비를 지향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통하여 수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립,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방성 확대, 친수공간을 이용한 문화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류지 확보, 홍수터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역사·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폐천부지를 활용한 저류지 조성(양평군 곡촌천)



어린이 체험·야외학습장 활용(거제시 교항천)



조석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sycho@inha.ac.kr

PUBLIC FINANCE COLUMN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최근 발표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¹에 따르면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위험 요소 1위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렇게 중대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행정, 재정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과학은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 방안과 저감 목표를 도출하며, 행정은 규제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실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재정은 연구와 행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른 환경오염 문제와 같이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오염자가 미세먼지 배출의 감시와 저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여건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미세먼지 오염 수준으로 저감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오염자 즉 기업이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감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큰 폭의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두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해식 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정부의 재정 자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



첫째, 설치된 지 3~5년이 경과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성능 개선을 보조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성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도 매 3~5년마다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규시설에 주로 적용하며, 기존시설은 이보다 크게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한 예로, 2014년 이전 설치된 천연가스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농도가 2015년 이후 설치된 발전소 허용 농도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는 설치허가 조건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이 서너 배씩 차이가 나곤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 팽창기를 이미 지나서 신설되는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은 기존시설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기존시설의 성능을 개선하여만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시설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는 행정구조상 어려우므로, 정부는 주로 대기오염 총량규제와 배출부과금 등과 같은 시장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기반 정책의 목표 저감량이 낮아 기존시설의 성능 개선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빈번히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기반 정책의 목표 저감량을 크게 높여서 매년 기존시설의 50%가 성능 개선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총량규제를 사용할 경우는 성능 개선에 의한 예상 저감량을 배출허용 총량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배출부과금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시설 역시 신



규시설에 준하여 초과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대기오염 총량규제와 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기존시설의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성능 개선 비용보조 및 세금 감면 등의 보상적 재정 지원을 통하여 성능 개선사업 시행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기 배출시설 오염물질 측정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와 지원을 한다.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을 배출사업자가 직접 측정하게 하고 있다. 이는 오염자가 오염물질 측정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작게는 부실 측정부터 크게는 부정 측정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적으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대형 사업장은 측정장비의 지속적 개선과 제3자 관리를 보장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측정대행업소에 측정을 위탁하는 중소형 사업장인데, 지도와 단속에 의존하는 현행 체제로는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소 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실 측정과 부정 측정을 근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측정대행업소를 지정하고 측정대행업소에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획기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지역에 산재한 중소형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오염물질 배출농도의 정확한 측정은 대기질 관리의 첫 걸음이고, 중소형 사업장의 오염저감시설 성능 개선에 촉매제가 된다. 그러나 중소형 사업장의 배출농도 측정 체제를 정비하면 측정비용이 상승하고 저감시설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중소형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미세먼지는 대표적 도시대기오염 문제인데, 도시대기오염 문제는 지역 혹은 지구 대기오염 문제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규제 일변도의 오염자부담 원칙이라는 과거의 일방통행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업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 수년 내에 국민이 염원하는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성능 개선 기술은 한 단계 발전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한다.



Fine dust Re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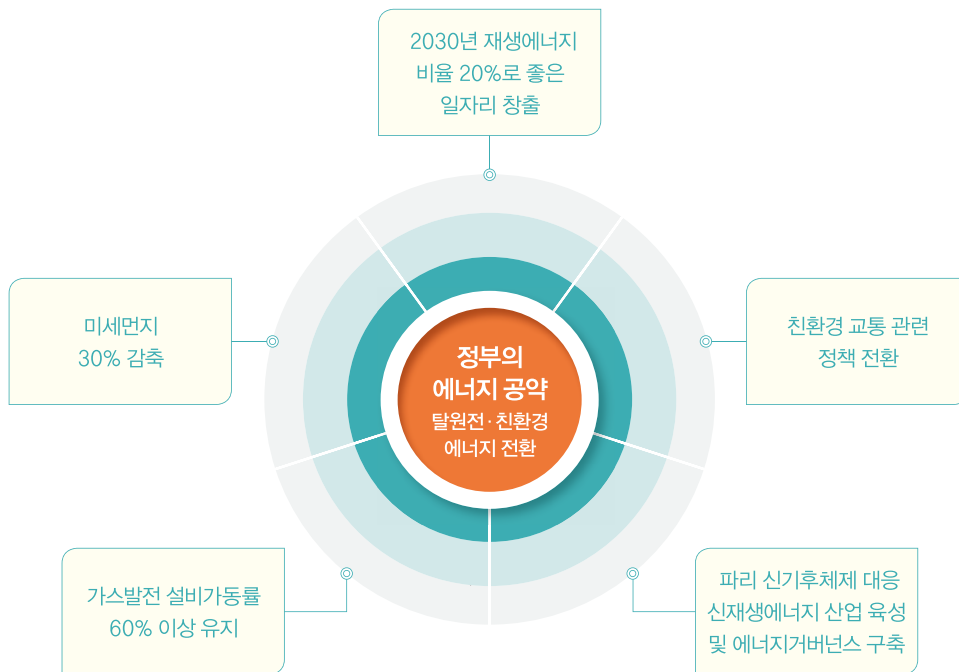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포용성장과 재정개혁 과제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후체제 및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과 포용성장 관련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공약으로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구축을 제시하며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2030년 재생에너지비율 20%로 좋은 일자리 창출, 가스발전 설비가동률 60% 이상 유지, 파리 신기후체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친환경 교통관련 정책 전환 등의 정책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분야를 통합관리 하는 미래지향형 재정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행 에너지 부문이 유발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GDP 대비 약 8.73%로 추정)¹을 에너지 가격체계에 반영한 뒤 에너지 세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여(GDP 대비 0.1~1%; 약 1.6~16조 원 규모) 국가에너지믹스 적정화를 추진하고 대국민 정책수용성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출 측면에서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특별회계 간 전입비율 조

1 김승래·김지영,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0.



정과 개별소비세 환원, 에너지·환경 관련 부담금 구조 합리화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의 통합조정으로 재정 간 칸막이 완화가 필요하다. 세입 측면에서 에너지원 간 공정성 확보와 단기적으로 유연탄과세, 원전연료과세, 경유과세 강화,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를 모색하여야 한다.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세계개편 합리화와 함께 유가보조금 가격지원보다 관련 세수재원 재할용으로 노후경유차 교체나 건설기계 오염저감장치 재정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공약에서 제시된 발전 부문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유연탄 발전 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과세 등을 통하여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가교로서 가스체 에너지의 역할을 중기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신기술(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 및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에너지 시장의 가격 기능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퇴출당하는 역행적 가격기제가 지속되어, 향후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및 안전급전, 시기별 가동률 조정·통제(수량규제)의 병행이 절실하다.

또한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의 상대가격이 1차 에너지원 대비 저렴하여 경제 전반의 과도한 전기 소비와 에너지 시스템 비효율을 부추기고 있

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한계를 감안하여 전기의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석유·도시가스 등 기타 연료와의 공정 경쟁 및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외부 불경제(환경, 안전, 사회갈등 비용)를 반영하여 전기소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탄소과세는 신기후체제 시대의 온실가스 저감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톤당 3,000~4,000원 수준의 낮은 세율로 탄소세 도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원별 세율체계의 목표치로의 조정과정은 정책수용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Phase-In 방식의 로드맵 형태로 강화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단기적 경기 충격, 주변국 동향, 제도 순응성,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품목에 탄력세를 적용도 가능하다.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일부 소득역진성을 감안하여, 에너지세제 강화는 저소득층 중심의 적정 소득보조 등 직접지원 대책(에너지바우처 확대)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간 석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 유연탄은 단순 열량세 개념의 세율만이 반영되고 있어 향후에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까지 현행세율 36원/kg의 최소 2~4배 정도 인상, 2030년까지 최대 6~7배로 인상). 또한 유연탄은 석유류나 LNG와 비교하여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석유류나 LNG와 동일수준 신설).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원전연료부담금 또는 원전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로는 발전연료 과세의 소비자가격 전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외에 전기 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징세기한 만료 이후 수송부문 에너지 개별소비세수의 운용을 교통혼잡비용과 환경피해비용으로 구분하여 교통부문사업과 환경·에너지사업 등으로 각각의 사회적비용에 맞게 적정 배분하는 재정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와 LPG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되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자체 대신 국세청이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및 생계형 운수업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및 효율향상을 위한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과 포용성장을 고려하여 에너지세제 강화 및 관련 재정 재할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나 가스요금 지원, 난방설비 효율화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화물차 연료전환·효율향상·환경오염저감장치 지원, 기초에너지보장제 실시 등과 병행이 바람직하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jeongin@cau.ac.kr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자연순환정책 방향



한국은 몇 년 전부터 환경오염 문제로 시끄럽다. 석면, 가습기 살균제, 미세 먼지, 폐비닐 수거 중단으로 인한 쓰레기, 최근에는 라돈 침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석면이나 폐비닐 같은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 가습기, 라돈 같은 문제는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가 간 환경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쉬운 것부터 풀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석면은 비교적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 그 대신 폐비닐 문제를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작된다. 이 법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즉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순환 이용성 평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을 다루는 법으로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연간 지정 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18개 업종,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업종별·사업장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 이용 및 감량 실적을 평가한다.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 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을 조치한다. 한편 재질이 다르고 분리·해체가 어려워서 재활용이 힘든 것은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지자체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면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거나 소각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50~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생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하여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

폐기물 종류별 부과 요율

폐기물 분류		매립	소각
생활 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 폐기물	가연성	25원/kg	10원/kg
	불연성	10원/kg	—
건설 폐기물		30원/kg	10원/kg

감면 대상		감면 기준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소각 시 소각 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75% 이상: 75%, 60~75%: 60% 50~60%: 50%
	폐기물 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100%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100%, 120억 원 미만: 50%
	지정 폐기물, 도서지역, 재난 폐기물	100%

자원순환법이 시작되자마자 폐비닐 수거 문제가 등장했다. 폐기물의 수거가 영세 업체에 의존하다 보니 유가변동으로 수익성은 악화된 상황에서 폐기물 수입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국내 재활용 제품 수요도 하락하면서 여기에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가세하여 생긴 문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품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제조 생산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모든 포장 용기류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유리병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EPR 분담금)을 2019년부터 차등 부과한다. 유통 소비 단계에서는 제품 출시 이전에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 하고,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고자 한다. 텀블러 사용자에게는 판매가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컵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컵보증금제 도입을 재개한다. 커피나 음료 전문점의 재활용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고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재활용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매체별로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문제는 재활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양 오염과도 연관이 있다. Jambeck *et al.*(2015)은 2010년에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 480만 톤에서 최대 1,270만 톤으로 추정했다. 만약 해양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025년에는 현재의 네 배 정도가 해양으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해양 평방 마일마다 플라스틱 46,000조각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적어도 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와 십만 마리의 상어, 거북이, 돌고래 등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간다고 한다(한국환경공단, 2014). Vegter *et al.*(2014)은 최대 170종의 척추동물 및 무척추동물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은 더 큰 문제다. 미세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Boucher and Friot(2017)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95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미세플라스틱은 약 15~31%를 차지한다. 매우 미세하여 수거가 어렵고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하고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낮출 수 있으며, 어류섭취를 통해 인체 피해를 유발한다(Miller *et al.*, 20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5)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다¹의 1㎡ 당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해외 평균보다 8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2015년 「마이크로비즈 청정 해역 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의 도입을 통해 마이크



로비즈를 함유한 세정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 또한 대만,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2016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했지만 규제 대상 제품은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원한다. 깨끗한 환경이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폐기물이나 재활용 문제는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에 기반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은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 제품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시민들은 감시자의 역할도 하지만 수요자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 특히 성실하고 똑똑한 분리 수거자가 되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을 책임 있게 할 때 깨끗한 사회로 나아간다.

참고 문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2015.
- 한국환경공단.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의 전망과 동향」. 2014.
- 환경부. 「201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2014.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018.
- 환경부. 자원순환법 보도자료. 2017.12.
- 환경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2015.
- Boucher, J. and Friot, D. (2017). Primary microplastics in the oceans: a global evaluation of sources. IUCN, Gland, Switzerland.
- Jambeck, J.R. *et al.* (2015). Plastic waste inputs from land into the ocean. *Science*, 347(6223), 768–771.
- Miller, K. *et al.* (2016). Plastics in Seafood—full technical review of the occurrence fate and effects of microplastics in fish and shellfish. *Greenpeace Research Laboratories Technical Report (Review)* 07–2016.
- Vegter, A.C. *et al.* (2014). Global research priorities to mitigate plastic pollution impacts on marine wildlife. *Endangered Species Research*, 25(3), 225–247.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재정투명성과 정보공개

e나라도움 포털 개편의 배경 및 특징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남북정상회담

해외재정동향

주요국의 국가채무 관리조직 현황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젊은 독립국가 초기 미국의 국토 확장

재정투명성과 정보공개

한승희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재정투명성은 단순히 국회나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과 OECD의 예산투명성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국의 정부통합홈페이지(www.gov.uk)를 참고하여 국민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재정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재정과 예산투명성을 높이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국제예산협의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의 예산투명성 지수(Open Budget Index: OBI) 항목구성에 바탕이 되었다. IMF는 1998년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를 통해 재정투명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OECD도 2001년 회원국들의 예산투명성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를 발간하였다. 재정은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¹, IMF의 재정투명성 기준이 OECD의 예산투명성 기준보다 적용범위가 보다 더 포괄적이다.

¹ 국가재정법 상에서 재정의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

IMF는 1998년부터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정투명성 규약(Fiscal Transparency Code)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8년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를 시작으로 하여,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를 발간하였다. 2007년에는 1998년에 제시하였던 ① 정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clarity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② 예산과정의 공개(open budget processes) ③ 정보의 공공이용성(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④ 신뢰성 확보(assurances of integrity)의 네 가지 규약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우수 사례를 반영하는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98년에 발간한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도 개정하였다. 2005년에는 천연자원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국가가 직면한 과제를 반영하여 「Guide on Resource Revenue Transparency」를 발간하였으며, 2007년에 이를 개정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규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원수입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2014년 IMF는 세계금융위기의 교훈을 반영하여 2007년 버전의 재정투명성 규약을 수정하였다. 개정된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은 ① 재정보고(Fiscal Reporting) ② 재정전망과 예산편성(Fiscal Forecasting and Budgeting) ③ 재정위험분석과 관리(Fiscal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④ 자원수입관리(Resource Revenue Management) 총 4가지 원칙들로 구성된다. 재정보고와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재정위험분석과 관리원칙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광범위한 협의작업을 통해서 마무리되었으며, 자원수입관리 원칙은 추가적인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2019년에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Fiscal Transparency Code



자료: IMF, 「Fiscal Transparency Handbook 2018」

2014년에 수정된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의 첫 번째 원칙은 재정보고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민이 정부의 재정운영과 성과에 대해 포괄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원칙으로는 적용범위(Coverage), 빈도와 시기(Frequency and timeliness), 질(Quality)과 신뢰성(Integrity)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보고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 부문의 재정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적시에 발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보고서의 정보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재정전망과 예산편성에 관련된 것으로, 포괄성(Comprehensiveness), 체계(Orderliness), 정책 방향(Policy orientation), 신뢰성(Credibility) 원칙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모든 수입, 지출과 자금조달에 대해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은 통합예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예산안은 적시에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정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요약본 등을 제공해야 하며, 예산 토론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경제·재정전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재정위험분석과 관리에 대한 것으로, 위험분석과 공개(Risk Analysis & Disclosure),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재정조정(Fiscal Coordination)의 세부원칙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재정위험에 대한 정기적인 요약보고서를 제공하고,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산과 채무와 관련된 위험은 공개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정부의 보증채무도 정기적으로 공개되며 법률로 관리되어야 한다.

OECD의 예산투명성 기준

OECD는 회원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투명성의 우수 사례인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를 발간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OECD 회원국들과 비회원국이 예산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예산보고서, 정보공개, 신뢰·통제·책임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예산보고서(Budget reports)에 대한 것으로 예산서, 사전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결산보고서, 선거 전 보고서, 장기보고서가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나타내는 예산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안은 국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목인 정보공개(Specific disclosures)에서는 경제전망, 조세지출,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피고용인연금지급의무, 우발채무에 대한 정보공개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전망을 할 때 핵심적인 경제 가정에 대해서 공개해야 하며, GDP 성장률, 고용률과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등에 대한 예측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인 신뢰, 통제와 책임 항목(Integrity, control and accountability)은 회계기준, 내부 재정통제 시스템과 책임, 회계감사, 국민과 의회의 감시 부문에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과 의회의 감시 항목에서는 국민에게 첫 번째 항목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 모든 보고서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OECD의 예산투명성 기준

1. 예산 보고서 (Budget reports)	1-1. 예산서(The budget) 1-2. 사전보고서(Pre-budget report) 1-3. 월간보고서(Monthly reports) 1-4. 중간보고서(Mid-year report) 1-5. 결산보고서(Year-end report) 1-6. 선거전 보고서(Pre-election report) 1-7. 장기보고서(Long-term report)
2. 정보공개 (Specific disclosures)	2-1. 경제전망(Economic assumptions) 2-2.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2-3. 금융부채와 금융자산(Financial liabilities and financial assets) 2-4.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2-5. 피고용인연금지급의무(Employee pension obligations) 2-6.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3. 신뢰, 통제와 책임 (Integrity, control and accountability)	3-1. 회계기준(Accounting policies) 3-2. 내부 재정통제 시스템과 책임(Systems and responsibility) 3-3. 회계감사(Audit) 3-4. 국민과 의회의 감시(Public and parliamentary scrutiny)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국민과 의회가 예산과정을 검토하거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보고서 및 재정사업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 알리오(www.alio.go.kr) 등에서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2012년 25개 정부부처와 385개 공공기관과 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약 2,000개의 웹사이트를 하나의 도메인(www.gov.uk)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보다 더 간결하고 더 명확하며, 더 빠르게(simpler, clearer, faster)”라는 모토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여 한국의 재정공개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정부통합홈페이지 첫 화면은 정책 홍보를 위한 이미지 파일 대신 세금 환급, 보조금 신청, 여권 신청 및 이민, 교육, 고용 등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고 빠르게 국민들이 필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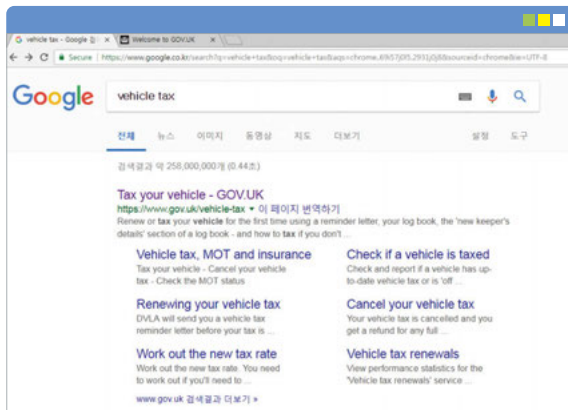
자료: 영국 정부통합홈페이지(www.gov.uk)

영국 정부는 ‘정부부처에 관계없이’ 한 사이트에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포괄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10년간 각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분석하여 공급자인 정부부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정부통합홈페이지 분류방식을 보조금, 장애인, 세금, 출생·사망·결혼·양육, 여권·여행·해외이주 등 16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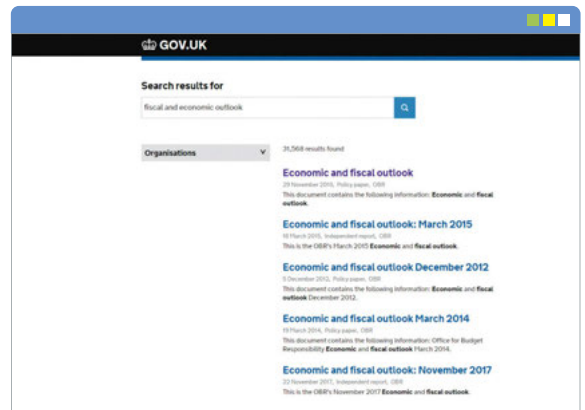
또한 영국 정부는 정부통합홈페이지와 구글(Google)의 검색엔진을 연동하였다. 즉, 국민들이 찾고자하는 정보를 구글에 입력하면 바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vehicle tax)를 검색하면 구글 검색 첫 화면에 www.gov.uk 사이트가 가장 먼저 검색되고, 자동차세 납부 시 체크해야 할 사항 및 납부 취소방법 등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동차세 관련 홈페이지를 찾고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세율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글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자동차세를 검색하면 관련 웹사이트 가 몇 개 안내되고, 이 웹사이트를 클릭하여 다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국의 정부통합홈페이지에서는 예산보고서와 통계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2018년 경제·재정전망보고서를 찾을 때, 예산책임청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예산책임청의 홈페이지에서 이 보고서를 검색하기보다는 www.gov.uk 사이트에서 한 번에 키워드 검색으로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재정정보는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지방정부 재정정보

영국의 정부통합홈페이지와 검색엔진 연계



영국의 정부통합홈페이지와 예산보고서 검색



자료: 영국 정부통합홈페이지(www.gov.uk)

는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지방정부 교육재정정보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공공기관 정보는 알리오(www.alio.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재정정보 공개 웹사이트를 포함한 한국의 행정서비스 이외에도 한국의 행정서비스 웹페이지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중앙부처(2,602개), 지자체(6,531개), 시도교육청(1,324개), 공공기관(1,539개)로 총 11,996개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재정정보공개사이트와 행정서비스 웹사이트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웹사이트에서 관련 재정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민원 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러드림e의 3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인 「정부24」 웹사이트를 개통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또한 2018년 재정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재정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정통계를 확대하고, 검색엔진으로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개별 재정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재정정보와 행정서비스 관리는 소관 정부부처에서 하더라도, '정부부처를 넘어선' 통합홈페이지 구축으로 국민들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재정정보를 얻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영국의 정부통합웹사이트는 정보제공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나라도움 포털 개편의 배경 및 특징

김남우 e나라도움 운영단 차장

knw1114@kpfis.kr

이정임 e나라도움 운영단 사원

jungim@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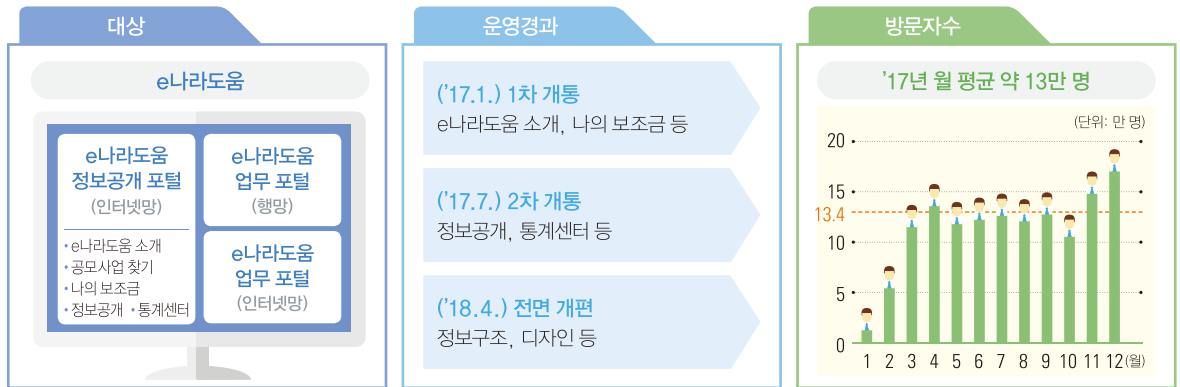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관리하는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포털 e나라도움(www.gosims.go.kr)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단장을 끝내고 2018년 4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 친근한 이미지 적용, 정보공개 확대 등 사용자 중심 개선으로 크게 달라진 e나라도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자.

개요

e나라도움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중심의 재정정보 공개 포털로 국고보조금의 처음과 끝을 중단 없이 공개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e나라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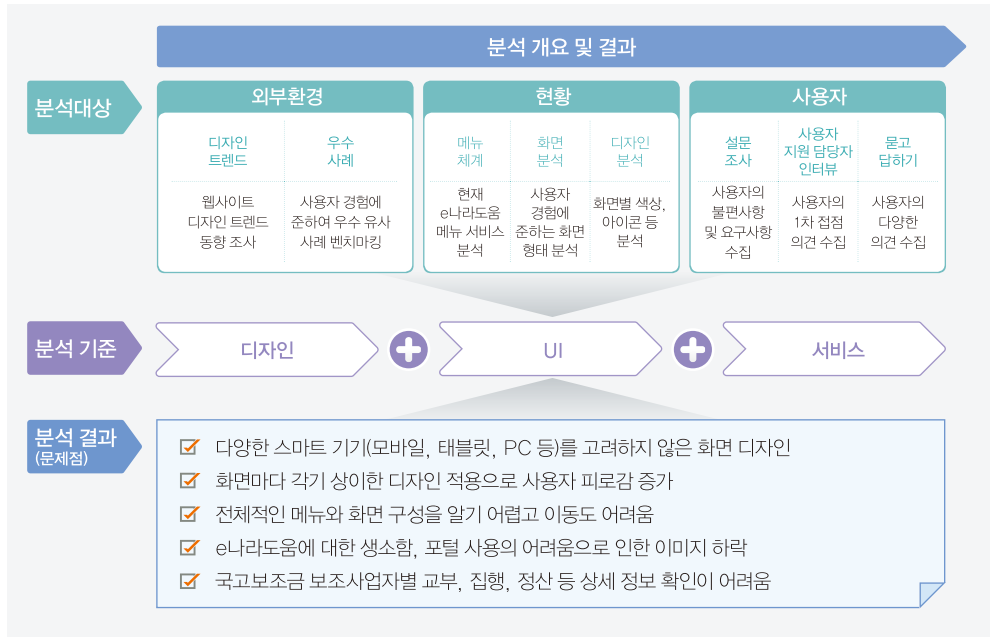


개편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17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만3세 이상 인구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88.5%, 스마트폰 이용자는 8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웹페이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e나라도움 웹페이지는 PC에 기반을 둔 최초의 화면 설계로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2017년 1월 e나라도움 첫 개통 이후, 메뉴·화면 간 이동의 어려움, 유사 중복 메뉴들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과 사용자 접근성 하락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정보 구조도 개편, 화면 표준 디자인 적용과 같은 포털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용자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현 e나라도움 포털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개요 및 결과



개편 특징

모바일 플랫폼별 서비스 최적화

모바일 기기별 화면 크기와 스크롤, 터치 등 액션을 고려한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모바일 기기에 제한 없이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제공하였다.

- 정보 입력: 마우스, 키보드
- 화면: 숫자 페이지 방식
- 메뉴탭: 가로 일렬 배열

- 정보 입력: 터치, 가상 키보드
- 화면: 숫자 페이지 or 슬라이드
- 메뉴탭: 세로 바둑판 배열

- 정보 입력: 터치, 가상 키보드
- 화면: 숫자 페이지 or 슬라이드
- 메뉴탭: 가로 일렬 배열

PC



모바일



태블릿



통합 표준 디자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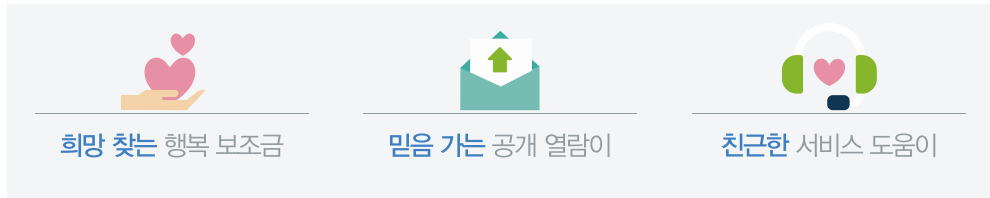
색상, 서체, 레이아웃 등 e나라도움만의 웹 디자인 기준(Web Style Guide)을 새롭게 정의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전체 포털 화면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별도의 이용 학습 없이 쉽게 포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미지 적용

기존의 딱딱했던 메인 화면을 다양한 색상의 조합과 귀여운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또한 '관리가 아닌 서비스 제공' 관점의 슬로건을 새로 구성해 적용하였고 포털 이용 목적이 드러나는 주요 메뉴를 메인 화면에 배치하는 등 서비스 지향적인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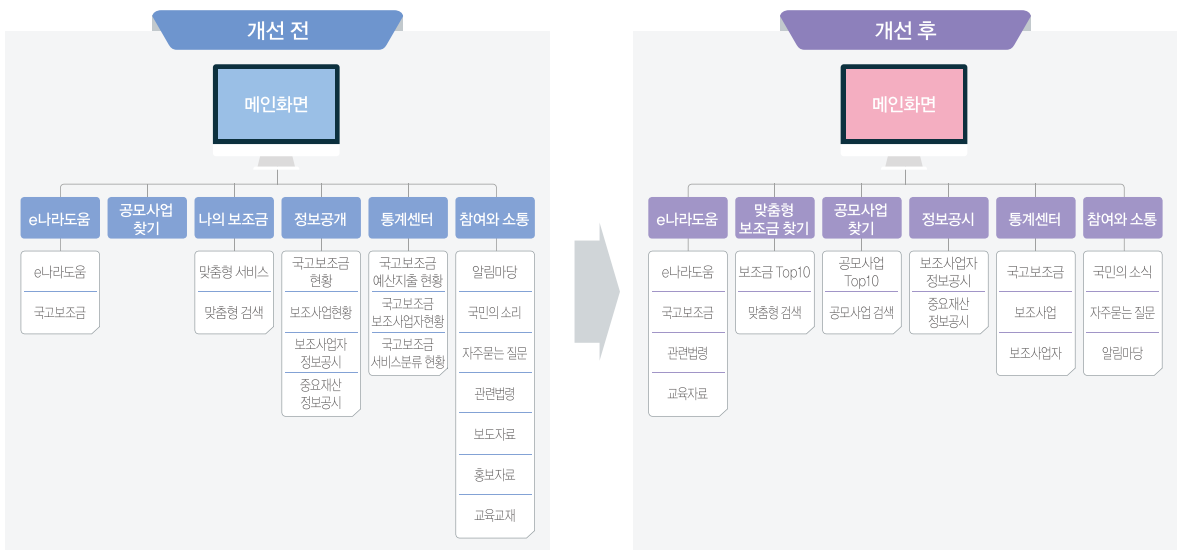


정보 구조 전면 개편

서로 중복되지 않고 누락이 없도록 유사·중복 메뉴를 통폐합하고 메뉴 구조의 넓이와 폭이 고루 분포되도록 메뉴 간 정보 균형을 조정하였다. 또한 메뉴별, 화면별 이름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재구성 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구조화 하였다.

사용자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체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맵을 구성하고, 작업 화면에서 원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한 연결 메뉴바를 새롭게 적용하였다.

정보 구조 개편 메뉴바



보조사업 수행 내역 상세 공개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내역을 보조사업별 6가지 상세 수행 내역(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서,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회계 감사 보고서)을 e나라도움 포털에 새롭게 공개하였다. 당해 연도 1천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 현재 e나라도움 정보공개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나라도움 대민 포털 One-Stop 활용법

위의 개편된 e나라도움을 통해 국민들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더 쉽고 편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e나라도움이 생소한 국민들이 어떻게 보조금 관련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맺음말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사업의 이해를 돕고 투명하게 국고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 관점 포털로 탈바꿈하였고 국고보조금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범국가 차원의 상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로써 e나라도움은 국민이 쉽게 국고보조금 정보에 접근하고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채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1.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2018년 4월 중 총수입은 48.7조 원, 총지출은 46.7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169.9조 원으로 진도율은 37.9%이고 전년 동기 대비 6.7조 원 증가(진도율 0.6%p 하락)하였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169.6조 원으로 진도율은 39.2%이고 전년 동기 대비 15.6조 원 증가(진도율 1.6%p 상승)하였다.

표 1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총수입 (진도율)	163.1 (38.6)	196.0	223.2	267.2	299.4	329.6	372.4	399.2	430.6		50.8	77.4	121.2	169.9 (37.9)
총지출 (진도율)	154.0 (37.6)	184.8	225.4	251.1	282.0	317.0	345.2	370.0	406.6		35.8	76.5	122.9	169.6 (39.2)
통합재정수지	9.1	11.3	-2.2	16.1	17.4	12.7	27.2	29.2	24.0		15.0	0.9	-1.8	0.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4.0	18.3	21.9	24.4	27.6	31.2	34.6	37.9	42.5		2.5	4.8	8.8	13.8
관리재정수지	-5.0	-7.0	-24.1	-8.3	-10.2	-18.5	-7.4	-8.8	-18.5		12.6	-3.9	-10.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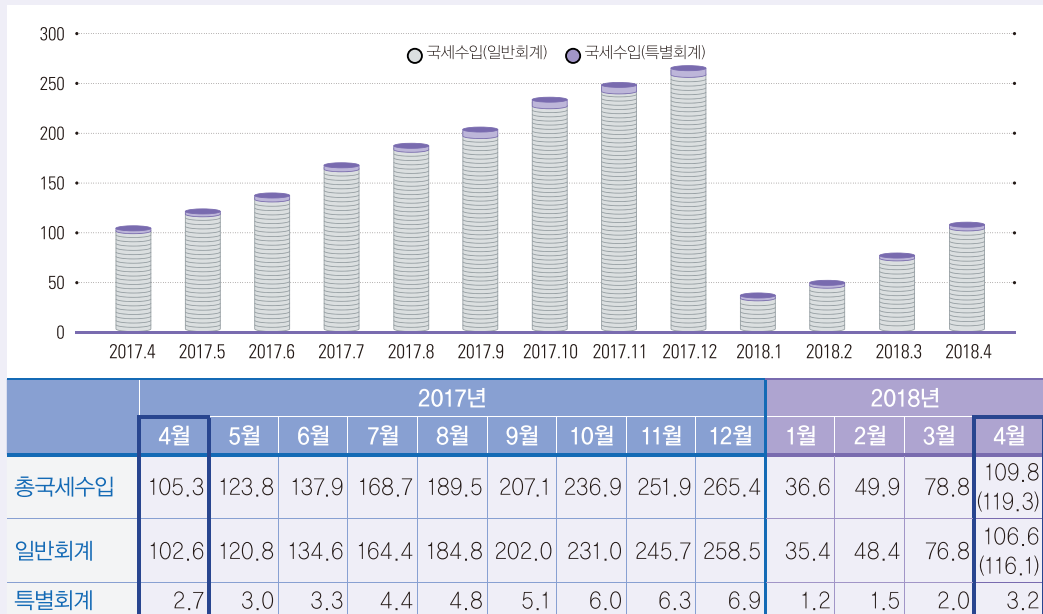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2018년 4월 중 국세수입은 31.0조 원(부가가치세 16.3조 원, 소득세 5.6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35.4조 원) 대비 4.4조 원 감소하였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09.8조 원이며, 일반회계 106.6조 원과 특별회계 3.2조 원으로 구성된다¹.

그림 1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괄호 안은 5월 2일에 납부된 법인세 분납 이월액 9.5조 원을 4월 실적 반영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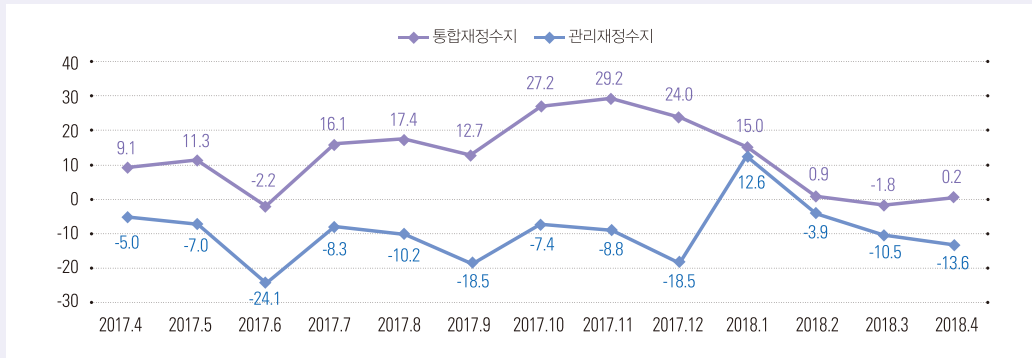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¹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3.31. → 4.2.)에 따라 분납기한이 연장된 이월법인세(9.5조 원) 감안 시 2018년 4월 중 국세수입은 40.5조 원(전년 동기 대비 5.1조 원 증가),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19.3조 원(전년 동기 대비 14.0조 원 증가)이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0.2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13.8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6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8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8.6조 원 악화되었다.

그림 2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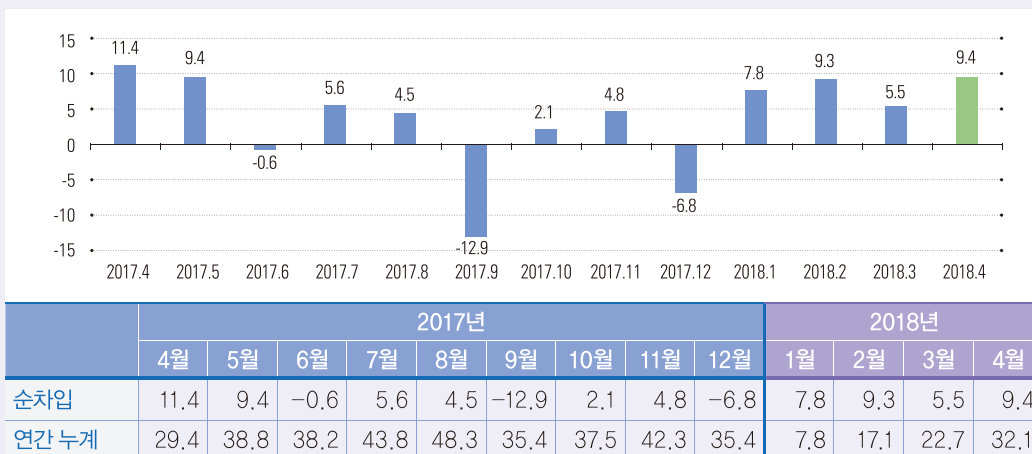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중앙정부 채무

2018년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9.4조 원이다. 순차입 규모는 국고채권 발행 증가(9.2조 원), 국민주택채권 발행 증가(0.2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9.4조 원 증가하였다. 2017년 4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2.0조 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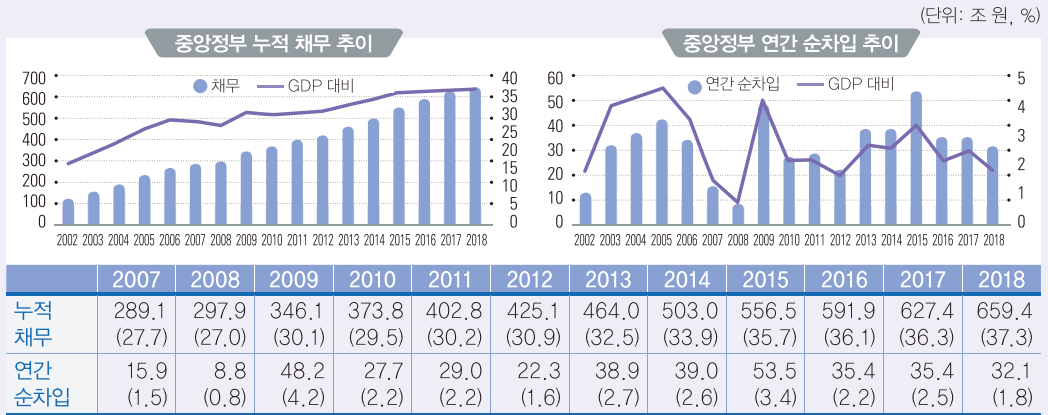
그림 3 월별 순차입 및 누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그림 4 중앙정부 채무 추이



주: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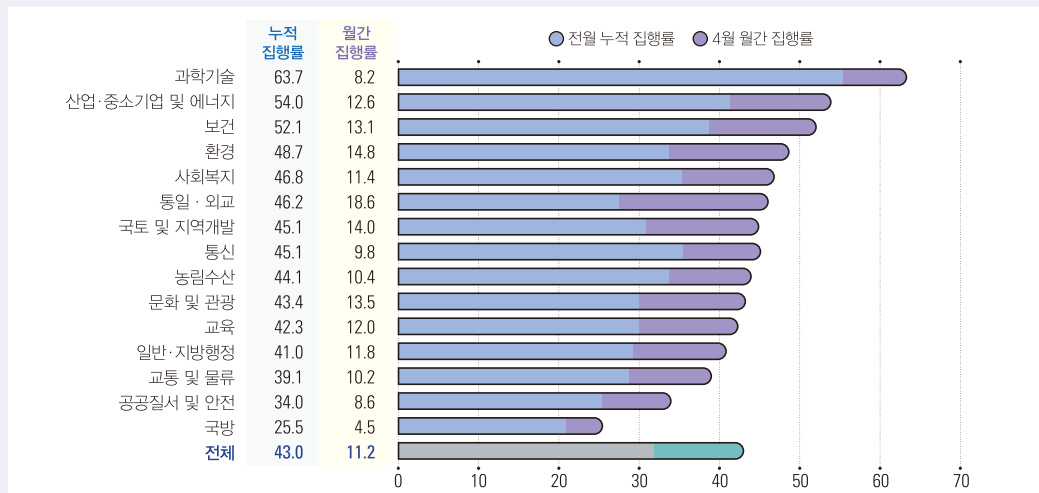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2018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 238.6조 원 중 4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102.6조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3.0%를 집행하였다. 4월까지 분야별 누적 집행률은 과학기술(63.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4.0%), 보건(52.1%) 분야의 순으로 높으며, 국방(25.5%), 공공질서 및 안전(34.0%), 교통 및 물류(39.1%) 분야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4월 월간 집행액은 26.7조 원(11.2%)이며, 분야별로는 통일·외교(18.6%), 환경(14.8%), 국토 및 지역개발(14.0%)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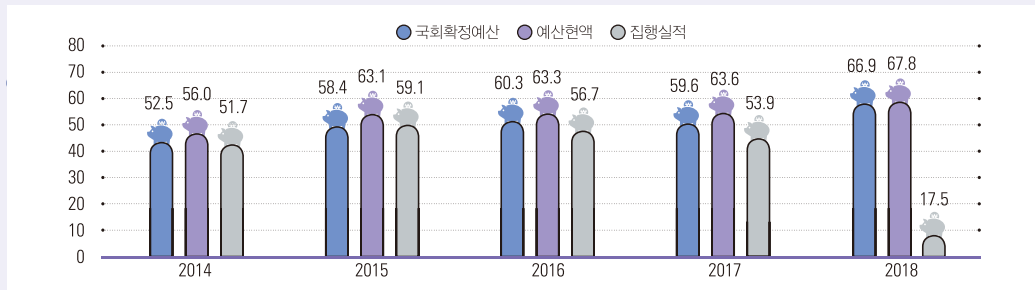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7.8조 원이며, 4월 누적 실적집행실적은 17.5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9% 집행되었다.

그림 6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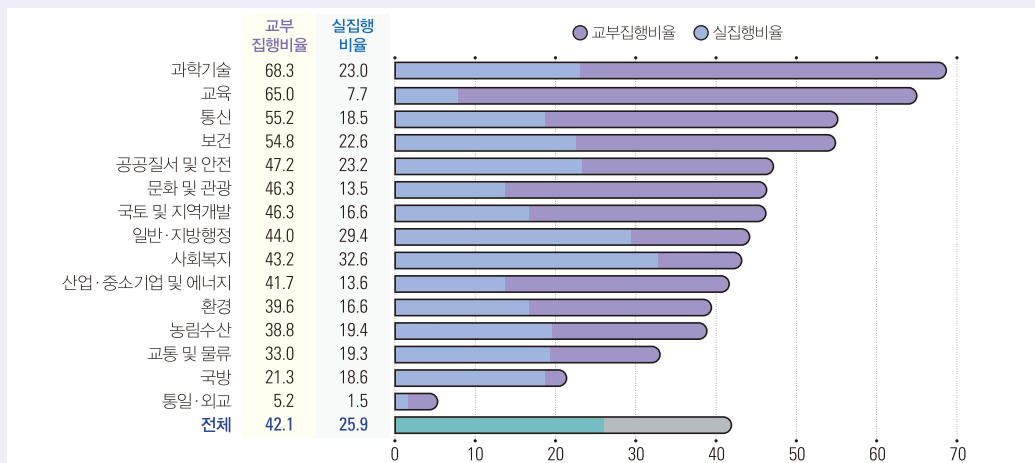
주: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실적집행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12조 3,317억 원, 농림수산 분야는 1조 7,943억 원, 환경 분야는 7,50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7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497억 원 실적집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집행액을 나타내는 교부집행비율은 과학기술 분야가 68.3%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실적집행금액을 나타내는 실적집행률은 사회복지 분야가 32.6%로 가장 높다.

그림 7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2018년 4월 누적 기준)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2. 국유재산

정부는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현금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며, 국유재산의 결산을 통해 국가재산의 현황과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우리나라 국유재산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국유재산의 개념과 유형

국유재산은 광의로는 국가가 소유한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재산을 지칭한다.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 증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품종보호권·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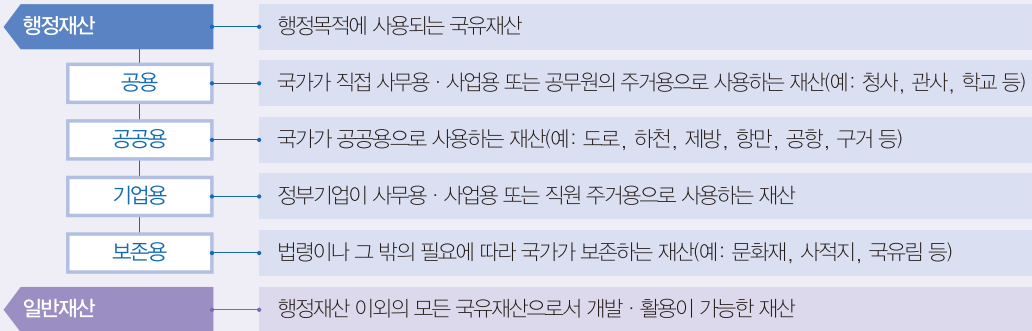
국유재산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설 제공·자연재해 방지·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 미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기능, 매각·임대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충 등 재정수입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국유재산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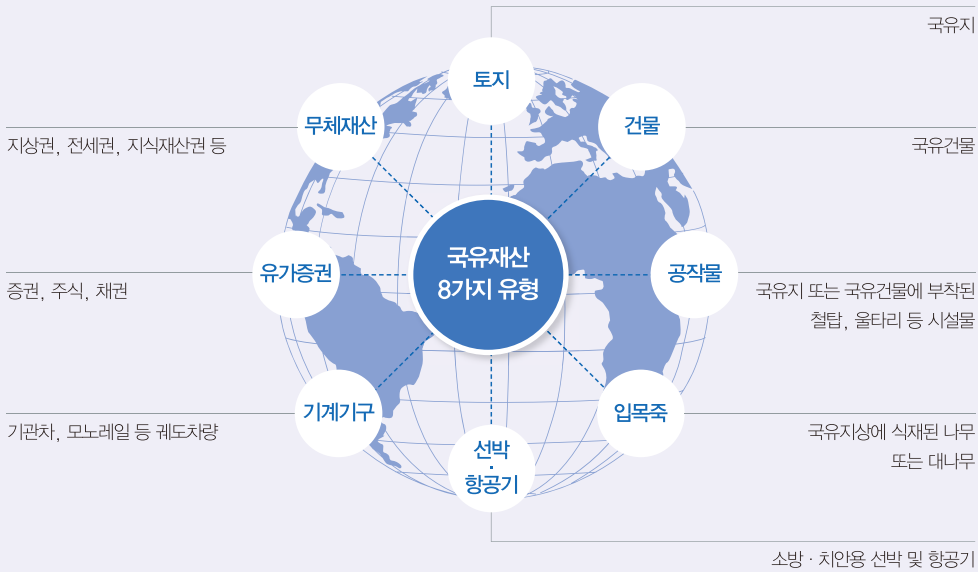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사무, 주거, 보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으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목적 외 사용과 처분이 제한되고, 사용 허가 기간 후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며, 국유재산과 달리 매각 또는 처분과 개발이 가능하다.

표 1 국유재산의 용도별 구분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 이외에도 자산유형별로 나눌 수 있다. 국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유가증권, 무체자산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 국유재산의 유형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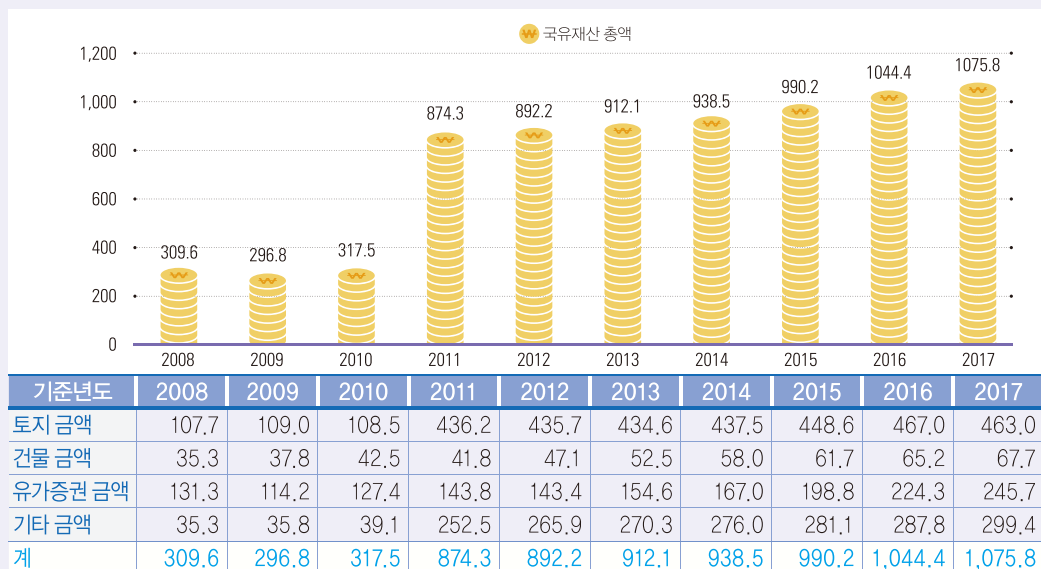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말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1,075조 7,551억 원이며 2016회계연도 국유재산 현재액(1,044조 4,087억 원) 대비 31조 3,463억 원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이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던 국유재산 총액은 2010년 317.5조 원에서 2011년 874.3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2011년부터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되어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재산을 포함하여 집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국유재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6년 1,000조 원을 초과하였다.

그림 3 국유재산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tiscaldat.go.kr)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행정재산은 799.9조 원으로 전년(2016회계연도 기준 787.3조 원) 대비 12.6조 원 증가하였고 총 국유재산의 74.4%를 차지한다. 일반재산은 275.9조 원으로 전년(2016회계연도 기준 257.2조 원) 대비 18.7조 원 증가하였고 국유재산 총 규모 대비 25.6% 차지한다. 행정재산은 주로 가격재평가, 신규취득으로 증가했으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변경, 유가증권 획득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

표 2 용도별 국유재산 현황

(단위: km², 조 원, %)

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총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16회계연도 (A)	24,109 (96.7)	787.3 (75.4)	831 (3.3)	257.2 (24.6)	24,940 (100.0)	1,044.5 (100.0)
2017회계연도 (B)	24,192 (96.8)	799.9 (74.4)	803 (3.2)	275.9 (25.6)	24,996 (100.0)	1,075.8 (100.0)
증감(B-A)	83	12.6	-28	18.7	56	31.3

주 1) 괄호 안은 총 국유재산 대비 구성비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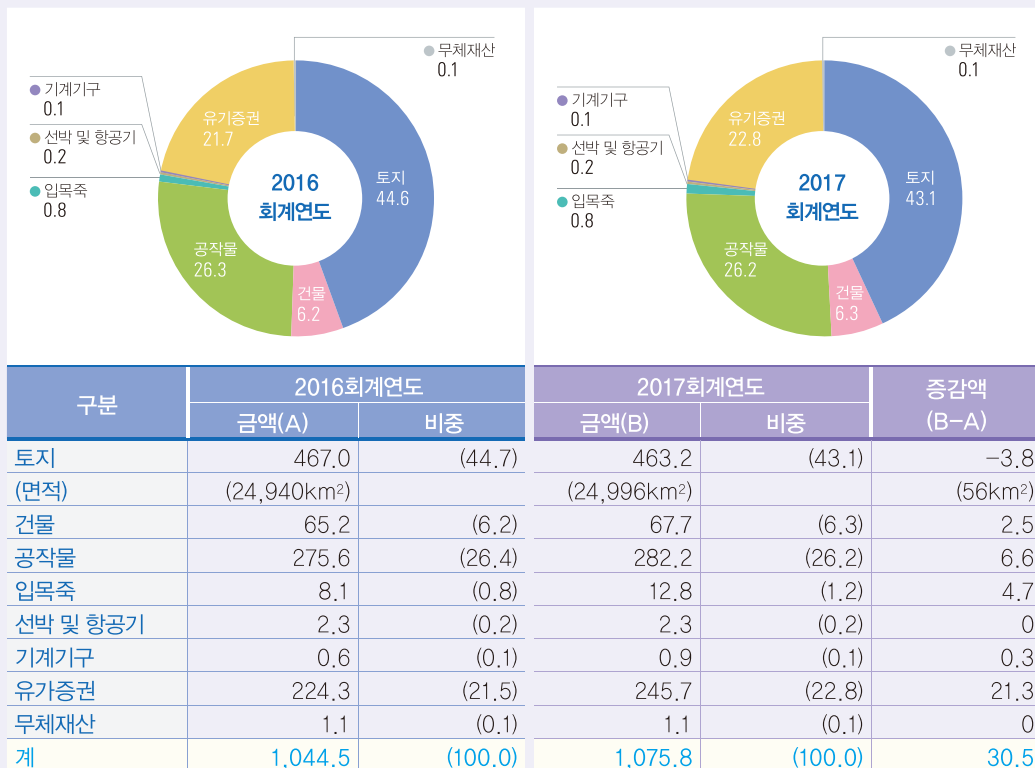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국유재산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075.8조 원 중 토지(463.2조 원), 공작물(282.2조 원), 유가증권(245.7조 원), 건물(67.7조 원), 입목죽(12.8조 원)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유가증권은 2016회계연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토지, 선박 및 항공기, 무체재산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이 중 가장 변동이 큰 국유재산은 유가증권(245.7조 원)으로, 2016회계연도(224.3조 원) 대비 21.3조 원 증가하였다.

그림 4 국유재산 유형별 현황

(단위: 조 원, %)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준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57.0조 원, 처분 총액은 25.1조 원으로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보다 32.0조 원 많았다. 이 중 토지의 취득은 7.9조 원, 처분은 3.2조 원으로 취득이 처분보다 4.7조 원 많았다. 건물의 취득은 11.5조 원, 처분은 0.3조 원으로 취득보다 처분이 11.2조 원 많았다.

표 3 국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단위: 억 원, %)

		2016회계연도(A)	2017회계연도(B)	증감(B-A)
토지	취득	99,632	79,390	-20,242
	처분	45,984	32,426	-13,558
건물	취득	73,286	114,844	41,558
	처분	3,521	3,062	-459
기타	취득	517,571	376,021	-141,550
	처분	233,532	215,087	-18,445
계	취득	690,489	570,255	-120,234
	처분	283,038	250,575	-32,463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준 국유재산 중 일반회계는 561.0조 원, 특별회계는 379.7조 원, 기금은 136.0조 원이다. 2016회계연도 대비 일반회계는 2.7조 원, 특별회계는 7.5조 원, 기금은 21.2조 원 증가하였다. 대규모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이며, 기금은 농지관리기금, 수계관리기금 등이 있다. 일반회계는 561.0조 원 중 부동산 행정재산이 417.5조 원(일반회계 국유재산의 74.4%), 특별회계는 379.7조 원 중 기타¹ 행정자신이 249.2조 원(특별회계 국유재산의 65.6%), 기금은 136.0조 원 중 유가증권 일반재산이 129.3조 원(기금 국유재산의 95.0%)으로 비중이 높다.

표 4 국유재산 회계별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6회계연도(A)	2017회계연도(B)	증감(B-A)
일반회계	558.2	561.0	2.7
특별회계	372.2	379.7	7.5
기금	113.9	136.0	21.2
계	1,044.5	1,075.8	30.5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¹ 부동산, 유가증권을 제외한 공작물, 입목축, 기계기구, 무체재산 등이다.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장부가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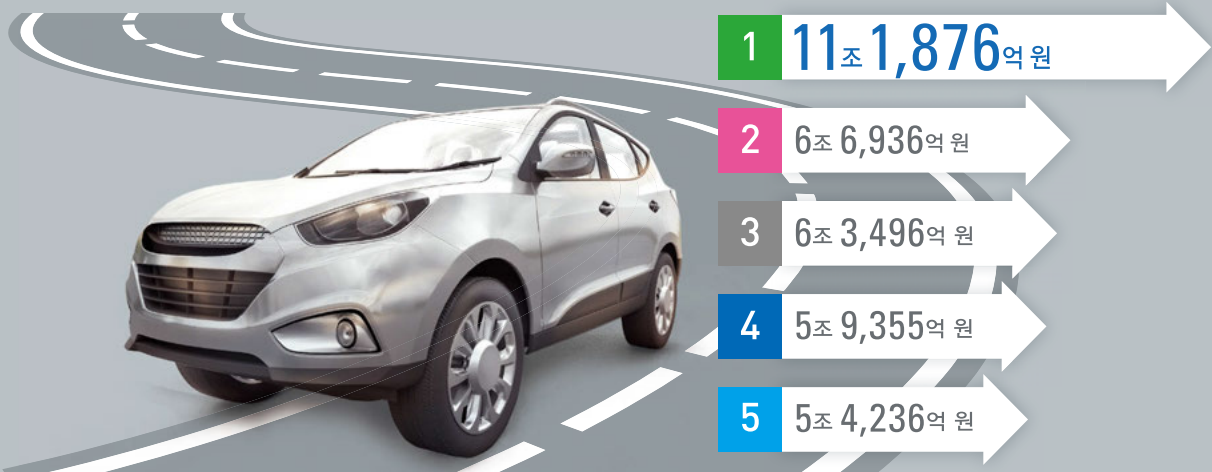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서울특별시



고속국도의 재산 가치는?

(장부가액 기준)

- 1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 2 서해안고속도로(서울~목포)
- 3 남해고속도로(부산~순천)
- 4 당진·영덕 고속도로(당진~영덕)
- 5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하남~통영)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취득가액 기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기획재정부)

353억 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세청)

1,007억 원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SW
(교육부)

286억 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2단계)
(국세청)

694억 원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국세청)

301억 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장부가액 기준)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관세청)

63억 원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과 미리)
(기상청)

352억 원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1호기
(관세청)

327억 원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2호기
(관세청)

96억 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서버
(관세청)

113억 원

이달의 이슈키워드: 남북정상회담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열리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다. 이번 호에서는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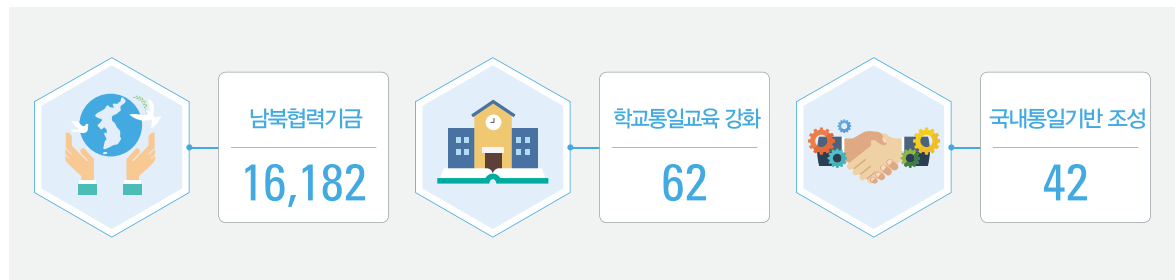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8.5.9.), 수집기간: 2018.4.1.~4.30.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 사업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초석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에 정부도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맞이하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부 추진사업

(단위: 억 원)



자료: 통일부(unikorea.go.kr)



남북협력기금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2018년 기준 운용규모 1조 6,182억 원)을 1991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원선 등 기반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주민왕래 지원, 사회문화교류 지원, 이산가족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남북경협 금융지원 창구로써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왕래지원사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의 참가와 같이 남북 간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북 관계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방문신청 등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서 할 수 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같이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행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과 간접비용, 찬조금·후원금·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등을 공제한 총사업비의 최대 70%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통일부 훈령 제548호, 2017.5.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지원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산가족 면회 및 각종 회담을 위해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 등의 생사확인, 상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생사확인 300만 원, 상봉 600만 원, 교류지속 80만 원 한도¹ 내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만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남북자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 보호대상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 경로연금수령자 등 특별지원대상자는 2배 범위 내에 지원한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남북이산가족찾기(reunion.unikorea.go.kr)에서 이산가족 등록신청을 하면 이산가족교류 대상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북한 주민에 대하여 일반·긴급구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WFP(옥수수 지원), WHO(말라리아 방제약품 및 기자재 지원), UNICEF(분유, 탈수방지제 생산설비 등 지원)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과 자연재해 시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등 민간단체(사업비의 50% 이내)를 통한 대북지원으로 구분된다.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은 대북지원 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에서 대북지원 사업자 신청을 하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통일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강화한다(학교통일교육 강화 사업, 62억 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통일교육 전문 강사진이 직접 방문하여 놀이와 문화가 접목된 참여·맞춤형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노래 부르기 등 통일문화 경연대회(경연대회 홈페이지, www.uni-contest.kr)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통일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통일리더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리더캠프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며 참가신청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다(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42억 원).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일방송 UniTV(unitv.unikorea.go.kr)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박람회 ‘평화로’를 개최하며 통일 친화적 환경을 확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국의 국가채무 관리조직 현황

심혜인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hyein@kpfis.kr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국가채무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 내 여러 부처 또는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국가채무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채무 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3월, IMF와 World Bank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는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는 관리조직과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조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형태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재무부 내에 국채발행 부서와 위험관리 부서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둘째, 국가채무 관리전담 조직을 두는 형태이다. 최종 책임은 재무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전담 조직이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경우로, 재무부는 큰 틀에서 차입수요와 정책지침을 전달하고 세부 내용은 관리전담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용한다. 독일, 영국, 스웨덴,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셋째, 중앙은행에 위임하여 국가채무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재무부는 차입 및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관리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경우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미국, 독일,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주요국의 국가채무 관리조직 현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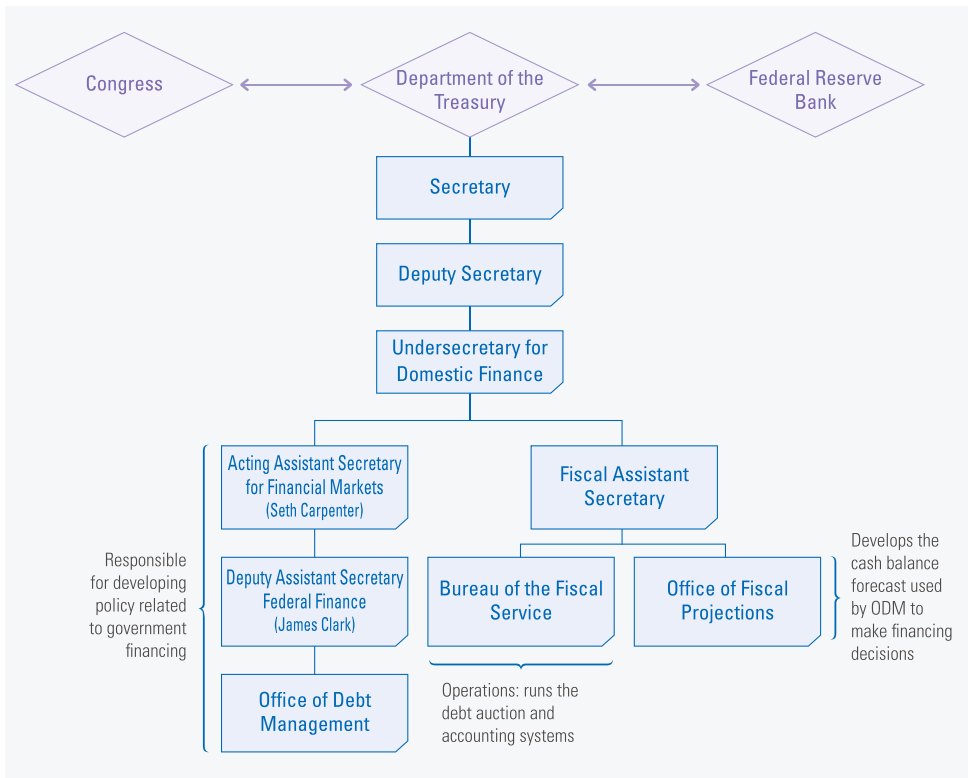
CASE 1 재무부 내부 설치 운영

미국은 장기에 걸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국가채무 관리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Congress)는 전체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상한을 결정하며,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의회가 설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차입을 실시한다.

미국 재무부는 정책부서와 운영부서로 나누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우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정책부서는 재무부 국내금융실(Office of Domestic Finance: ODF)의 하위부서인 금융시장과(Office of Financial Market: OFM)로, 이 중에서도 주로 채무관리부(Office of Debt Management: ODM)에서 국채발행에 대한 정책입안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OFM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재무부의 채무관리정책, 재무부 및 연방 증권의 발행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한다.
- 재무부의 공식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을 작성하고 연방 차입 및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금리를 설정하며, 정부증권 시장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 분기별로 채무관리정책을 발표하고, 재무부 자문위원회(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 TBAC) 및 시장참가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입수요를 관리한다.

미국의 국가채무 관리체계



자료: 미국 재무부(www.treasury.gov)

한편, 국채입찰 및 국고자금운용 관리 등의 운영업무는 재정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s: FS)에서 담당한다. 2012년 10월 7일 미국 재무부 내 두 개의 국인 공공채무국(Bureau of the Public Debt: BPD)과 금융관리서비스국(Bureau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 FMS)이 통합되어 FS가 설립되었다. 참고로 통합 전 BPD는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공채무의 회계를 담당하였다. 정부증권의 회계와 상환 업무, 등록된 계정관리와 이자지급, 공공채무의 회계관리와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밖에 증권권의 분실·훼손·도난 등에 대한 처리업무와 소매증권 및 미국저축채권의 판매·보관업무도 수행하였다. 또한 FMS는 재무부에 보고 의무를 수행하고, 개인소득세·법인세 등 모든 연방 정부 수입을 관리하며, 연방정부의 중앙회계시스템과 보고시스템을 관리해왔다. 2012년 통합 후 FS에서 이와 같은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연방준비은행은 재무부계정을 유지하며, 재무부 증권을 청산, 경매해 주는 등 정부의 재정대리인으로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채권의 전자회계시스템을 관리 및 운용하고 재무부채권의 발행·유지·상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채무 관리와 통화정책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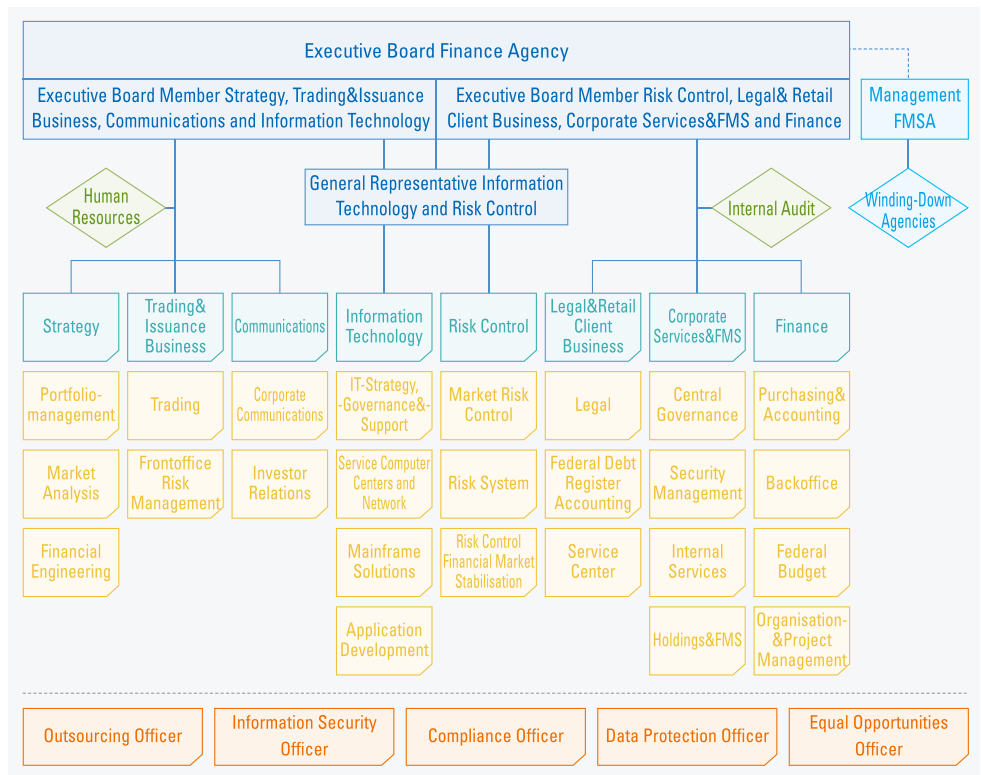


CASE 2 별도 외청 형태로 운영

독일은 현재 재무부와 독립적으로 국채발행과 국가채무 관리를 전담하는 재정기관(Finance Agency: FA)을 두고 있다. FA는 연방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가 대표하는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을 1인 주주로 하는 법인 유한책임회사(legal form GmbH)의 형태이다. 2000년 9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06년 8월 1일 「연방정부채무관리법」(BSchuWG)에 따라 연방증권관리국(Federal Securities Administration)과 합병됨으로써 채무관리 전담기구가 되었다¹.

FA는 연방재무부, 독일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 및 연방증권관리국이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FA의 주요 목적은 독일의 국채발행 및 국가채무 관리

독일 국가채무 관리 전담기관(FA) 조직 현황



주 1) 2018년 5월 25일 기준 현황임

2) FMS: Financial Market Stabilisation Fund

3) FMSA: Federal Agency for Financial Market Stabilisation

자료: 독일 재정기관(www.deutsche-finanzenagentur.de)

¹ 2018년 1월 1일 「FMSA 개편법」에 따라 기존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연방기관(Federal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Authority: FMSA)이 관리하던 금융시장안정화기금(Financial Market Stabilisation Fund: FMS)도 FA에 통합되었다.

독일 국가채무 관리 전담기관(FA)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Strategy (전략부)	- 연방증권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계획 - 이자율 예측 및 시장 분석 - 부채 포트폴리오의 위험구조와 이자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모형 개발
Trading & Issuing Business (거래 및 발행 사업부)	- 연방부채 관리와 관련된 모든 시장 활동을 수행 - 경매 수행에 대한 책임 - 전략부를 대신하여 유통시장에서 연방증권을 거래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스왑 거래(이자율 스왑) 체결
Communications (통신부)	- 투자자들에게 중심적인 접점으로서의 기능 - 연방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언론 문의를 관리하고 학생, 국내외 무역 방문객 또는 시민을 요청하는 모든 관심 있는 단체와의 의사 소통 담당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부)	- 안전한 IT 운영 및 IT 아키텍처를 담당 - 재정청의 모든 IT 시스템을 관리 및 IT 애플리케이션 개발 - 외부 IT 파트너의 조정을 담당
Risk Control (위험 통제부)	- 자금 조달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감시 - 연방재무부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검토 - 이자비용을 계획 및 모니터링 - 부채 포트폴리오를 연방재무부에 보고
Legal & Retail Client Business (법 및 소매 고객 사업부)	- 연방증권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하는 민간 투자자 담당 - 재정청의 소매 투자상품 판매 중단 이후 남아있는 소매 채무 계좌 관리
Corporate Services & FMS (기업서비스 및 FMS부)	- 중앙관리 부서 - 보안 관리 및 내부 서비스 등
Finance (재무부)	- 상업적, 법적, 조직적 관점에서 재정청의 적절한 운영 보장 - 조직 및 프로젝트 관리 - 연방정부 재무제표의 회계 처리 및 관리 등
기타 (Management FMSA 등)	2018년 초까지 연방 금융시장 안정화 당국(FMSA)의 업무 재구성될 예정

자료: 독일 재정기관(www.deutsche-finanzzagentur.de)

전담기구로서 독일 정부의 중장기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조달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지급능력 확보, 연방 예산의 이자지출 최적화, 연방정부 부채 포트폴리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FA는 금융시장에서 연방정부의 이름과 계좌로만 운영하며, 유가증권(securities) 등의 발행 시 독일중앙은행과 긴밀히 협력한다². 2018년 기준 FA의 직원 수는 약 300명으로, 거래 및 발행 사업, 전략, 시장지원 및 모니터링, 정보기술, 위험통제, 재무 등 약 8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² 독일중앙은행은 법적으로 정부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부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위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같다. 첫째, 연방정부 예산의 자금조달 및 단기 유동성 자금 조달 업무이다. 연방증권 발행, 약속 어음 차입, 파생금융상품, 자금시장 운영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둘째, 독일 국채발행계획 및 실무절차 담당 업무이다. 위험구조와 이자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모형을 개발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스왑 거래(이자율 스왑) 체결한다. 셋째, 개인투자자의 국채투자 관리 업무이다. FA의 소매 투자상품 판매 중단 이후 남아있는 소매 채무 계좌를 관리한다³. 넷째, 정부부채 관련 유동성 관리 및 위험관리 업무이다. 연방재무부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이자비용을 계획, 모니터링하는 등 자금조달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감시한다. 또한 기타 일반 업무로 인적 자원, 내부 감사, 보안 관리, 중앙 통제,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CASE 3 중앙은행에 위임 운영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채무 관리가 재무부 또는 지정된 국가채무 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덴마크에서는 덴마크국립은행(Danmarks Nationalbank)의 정부채무 관리부서(Government Debt Management: GDM)에 의해 수행된다.

덴마크국립은행은 1818년에 설립되어 1936년부터 독립기관이 되었으며, 현재 활동의 법적 근거는 같은 해인 1936년 시행된 「덴마크국립은행법」(Danmarks Nationalbank Act)이다. 덴마크국립은행법에서 덴마크국립은행의 목표는 안전한 통화시스템을 유지하고 돈의 흐름과 신용 확대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 관리를 덴마크국립은행에서 수행하면 정부채무정책, 통화정책 및 재무 안정성 간의 상호 작용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책임은 ‘덴마크국립은행과 재무부 간 국가채무 영역에서의 업무 분담에 관한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재무부는 중앙정부의 차입 및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적 책임이 있으며, 덴마크국립은행 국가채무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책임을 따른다. 첫째, 발행전략 준비 및 정부증권 발행의 책임이다. 재무부의 정부 예산전망에 기초한 발행전략을 준비하고, 중앙정부의 국내 자금조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정부 유가증권을 발행하며, 외환보유고 유지와 중앙정부의 시장 접근성을 위해 외국 정부 증권을 발행한다. 둘째, 위험관리의 책임이다. 중앙정부 채무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장 위험을 분석 및 관리하고, 이자율 및 통화 스왑과 관련된 신용 리스크를 관리한다. 셋째, 정부 기금⁴, 대출자금 및 정부증권 관리의 책임이다. 정부 기금의 자산을 관리하고 정부 소유 회사에 대한 정부 보증과 자금대출을 관리하며 다른 주권 국가들에 대한 양자 간 대출과 같은 특별대출을 관리한다. 넷째, 자문 서비

³ 2012년 독일은 정부증권을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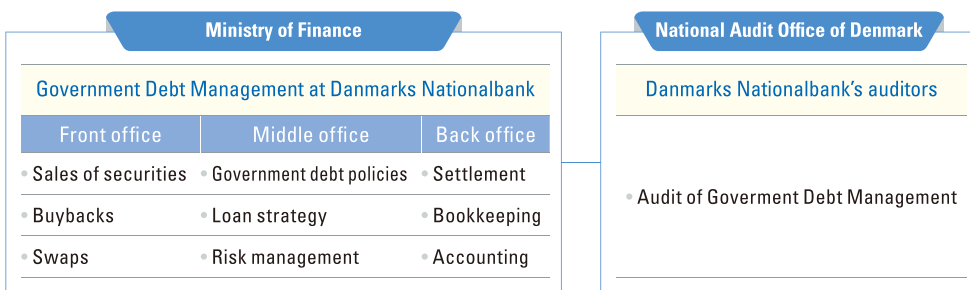
⁴ 중앙정부 차입 및 채무 관리의 일환으로 사회연금기금(Social Pension Fund), 선진 기술 재단(Advanced Technology Foundation), 보다 나은 노동 환경 및 노동을 위한 기금(the Fund for Better Working Environment and Labour Retention) 등 세 가지 정부 자금의 재대출 및 정부보증 및 자산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스 및 국제 협력의 책임이다. 주택보조 용자와 관련한 이자율 위험 등 중앙정부의 재정적 위험에 대하여 재무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정부증권 시장에서 중요한 금융 규제에 대해 부처와 기관에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OECD, IMF, World Bank, EU 등 정부 채무관리 분야의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자와의 접촉의 책임이다. 중앙정부 신용등급에 관한 신용평가기관과 접촉하고 정부채무정책과 금융 및 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

덴마크국립은행의 국가채무 관리부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프런트 오피스(front-office), 미들 오피스(middle-office), 백 오피스(back-office)로 구분된다⁵. 이와 같은 기능의 분리는 운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우선, 미들 오피스는 국가채무정책을 공식화하고 차입 전략 및 위험 관리를 위한 제안을 준비한다. 미들 오피스는 합의된 전략에 따라 발행, 매입 및 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프런트 오피스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외국 차용, 대출 및 정부 보증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며 사회연금기금 이사회 및 주택보조를 위한 자금조달 그룹에 참여한다. 한편, 프런트 오피스는 매월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부채무 정책의 운영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경매 개최, 매입, 증권 대여 및 스왑 거래를 포함하는 정부증권의 발행 등이 포함되며, 대출에 대한 시장 조건을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백 오피스는 채무 및 스왑 서비스를 포함하여 중앙정부 채무에 관한 정산을 수행한다.

정부채무 영역의 감사는 덴마크의 국가 감사부서(Rigsrevisionen)를 대신하여 덴마크국립은행의 회계 감사원이 수행한다. 덴마크국립은행의 회계 감사원은 정부채무 계정이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다. 덴마크의 국가 감사부서도 정부채무가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덴마크의 국가 감사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덴마크 국가채무 관리체계



자료: 덴마크국립은행(www.nationalbanken.dk)

⁵ IMF와 World Bank의 「Revised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2014)에서도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조직을 그 기능에 따라 프런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프런트 오피스는 국채발행계획에 따라 국채를 발행·상환, 바이백(buy-back) 실시, 국채발행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 등 국채시장을 상대로 국채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한 기능들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미들 오피스는 발행된 국채에 대한 위험관리와 차년도 국채발행전략을 수립하고 프런트 오피스에 대한 조언을 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위험관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백 오피스는 국채발행의 정산 및 회계 기능을 담당한다.

젊은 독립국가 초기 미국의 국토 확장

하연수

hayonsu@naver.com

미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건국한 지 200년 밖에 되지 않아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과 비교해도 매우 젊은 국가입니다. 어떻게 건국한 지 200년 정도 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쥌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원래 식민지였습니다. 사실 선진국 중에 식민지였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에는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개발도상국입니다. 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만이 특출한 것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불가사의한 일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설명하기 위한 열쇠는 미국의 특이한 역사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력의 가장 큰 원천은 광대한 영토와 자원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요. 러시아와 같이 국토 대부분이 농토인 국가와는 달라서 땅을 파면 금맥, 유전, 광산 등 무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독립 당시 동부에 13개 주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개 주는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입니다. 면적은 약 200만㎡로 현재의 멕시코와 비슷한 규모입

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까지 독립 당시의 영토를 그대로 보유했다면 초강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중견 국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독립 이후 급격한 팽창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했을 당시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캐나다 주변을, 프랑스는 루이지애나 지역을, 스페인은 멕시코 주변을 식민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네덜란드도 뉴암스테르담(지금의 뉴욕) 등 각지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강의 경쟁으로 미국이 끼어들 틈이 생겼습니다. 서구제국은 식민지 경영에 큰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경영이라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출할만한 좋은 물건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돈을 버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원주민과의 분쟁도 있어서 군대가 항상 대기 상태여 합니다.



19세기 미 대륙에는 식민지 경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역이 많아 미국은 이런 지역을 닥치는 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독립 후 20년이 지난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인수했습니다. 214만㎡ 토지를 1,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토지 면적은 전보다 2배가 넓어졌지요. 1819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주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은 왜 그렇게 많은 식민지를 인수했을까요? 미국에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 것은 욕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민이 와서 거주하기만 하면 그대로 국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구제국이 버리고 간 식민지를 하나하나 인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언들로부터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와 같은 토지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토지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인디언과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리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감언이설로 인디언의 토지를 빼앗은 것이지요.

미국 정부는 인디언의 토지를 1ac(약 1,200평)당 1센트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1센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입니다. 인디언들은 반발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1845년에 미국은 텍사스를 병합합니다. 텍사스는 멕시코의 영토였습니다.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는 텍사스를 개발하기 위해 국적을 따지지 않고 거주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많은 미국인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1836년에는 텍사스가 멕시코에 대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호의로 미국인의 거주를 허락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멕시코는 진압부대를 파견했지만 텍사스 군의 반격과 맞먹고 맙니다. 그렇게 독립을 이룬 텍사스는 미합중국에 병합됐으면 좋겠다는 타산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텍사스를 취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만약 텍사스를 합병하게 되면 멕시코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텍사스를 합병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열되어 미국 정부는 1845년 멕시코에 특사를 파견해 약간의 보상금을 내는 조건으로 텍사스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 후 전쟁에 돌입하게 됐고, 미국은 멕시코 영내까지 진격해 1년이 걸리기도 전에 멕시코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이때의 승리로 미국은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멕시코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치른 대가는 1,5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시점에 거의 현재와 같은 미국 영토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독립 당시에 비교하면 무려 네 배나 넓어진 셈입니다.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 면적은 한반도의 8배, 미국 국토의 15%를 차지합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영토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미국 위에 캐나다, 캐나다의 왼쪽에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토지가 미국에 영입될 수 있었을까요? 알래스카를 처음으로 점유했던 것은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1799년, 유럽제국 중 가장 먼저 알래스카에 진출한 제정 러시아가 영유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식민지와 같이 지배하지 않았고, 이누이트로부터 물개나 해마의 모피를 구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포획 때문에 모피를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알래스카를 팔아버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867년, 1㎡ 당 5달러, 총 720만 달러로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720만 달러는 당시 미국의 전체 세수의 1퍼센트 정도였습니다. 1867년 당시의 720만 달러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9,0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960억 원이며, 이는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429조 원)의 4,500분의 1 정도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2018년 상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시행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년 5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타지키스탄 등 아시아 9개국 재정당국 고위 공무원 대상으로 '2018년 상



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 연수(영문명: 2018 1st half 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Asia Pacific)를 진행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연수 참가국 대표단들에게 한국의 재정개혁 및 dBrain구축 경험이 있는 강사를 구성하여 재정제도 혁신 강의, dBrain시스템 데모 등을 통해 생생하고 심도 있는 재정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국제협력 로드맵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수를 통해 참가국간 재정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미션을 완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2018년 1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찾아가는 교육 운영

dBrain운영분부는 dBrain정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원거리 사용자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호남 지역(교육장: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8년 5월 14일(월)



부터 18일(금)까지 5일 동안 예산 편성, 지출, 조달(계약), 국유재산, 물품 5개 과정에 대해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약 18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앞으로도 교육 참여 여건 및 사용자 요구, 교육 참석자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인터넷 카페 '신통방통 e나라도움' 개설

사용자 간의 정보교류 및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2018년 5월 16일(수) '신통방통 e나라도움(<http://cage.naver.com/enaratong>)' 카페를 개설하였다. 각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본 카페는 국고보조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사용자 본인의 e나라도움 관련 자체 매뉴얼 제작, 노하우 자료 게시 등과 같이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활동 우수자 선정, 서포터즈 모집, e나라도움 홍보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카페가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국 재정부 공무원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2018년 5월 23일(수) 중국 재정부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정보화 연수단 6인은 한국의 재정개혁 및 dBrain시스템 등을 배우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중국 재정부 연수단을 대상으로 정보원 설립 배경, 조직 및 기능과 한국의 재정개혁, dBrain구축 경험을 공유하였고, 향후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dBrain사용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dBrain운영본부는 사용자 의견의 직접 공유 및 사용자 개선요구 사항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2018년 5월 30일(수) dBrain사용자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7개 부처 수입·지출·조달(계약) 실무자 40명과 dBrain운영본부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콘텐츠 제공, dBrain교육 과정, 업무편의 기능, 결산업무 지원 등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분석을 거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올 하반기 사용자협의체와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월간
**나라
재정** JUNE
2018 Vol. 18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tis.or.kr
발행인	김현수(한국재정정보원장 직무대행)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